

67주년 광복절에 항일독립운동가단체·한일관계시민운동단체 가 2012년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들에게 보내는 공개질의서

올해로 광복절 67주년이 됩니다. 가슴 벅찬 희망으로 맞이해야 할 광복절이 어느사 이 우리 모두에게 빼아픈 성찰을 요구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특히 올 광복절은 저희들 항일운동과 시민운동가 단체들에게 민족의 자주와 민주주의, 그리고 인권을 향한 희망 보다는 어느 때보다도 깊은 탄식과 우려 속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일제 침탈에서 벗어나 자유와 평등에 기초한 자주적인 민주국가를 건설해야 하는 광복의 과제는 여전히 완수하지 못한 현안입니다. 새삼 한반도를 둘러싸고 군사 대결과 무력 충돌의 위기상황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1953년 정전협정은 지금까지 60년간이나 지속되면서 한반도 군사대립의 지렛대 역할을 해 오고 있습니다.

원자력과 핵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서도 확인했듯이 국경을 넘어서 인류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현 집권세력은 변화하는 세계사의 숨 가쁜 흐름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낡은 냉전패러다임에 집착하면서 위기상황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경제 발전의 주축으로서 피와 땀을 흘리며 희생한 99% 국민들은 폭력적인 신자유주의 경제시스템에 의해 1% 기득권층을 위한 불평등 제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에 따른 사회 양극화의 심화로 사회발전의 동력을 사라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쟁취를 위해 바친 숭고한 희생정신은 욕망의 정치와 물질만능의 경쟁주의에 매몰되어 그 가치를 잃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일부에서는 아집과 독선에 찌들은 특권집단으로 전락하여 공동체의 가치를 팽개치고 있습니다.

그동안 민주화를 이루었다고 내세운 지 20년이 넘은 최근 몇 년간에 직면한 문제점들은 우리 사회를 전면적으로 재점검할 필요성을 심각하게 제기하고 있습니다. 자유와 인권, 평등에 관한 여러 분야의 각종 지표에서도 명백히 확인되는 퇴보현상은 외면할 수 없는 엄중한 현실입니다. 그런 현실 탓인지 어처구니없게도 해방된 지 반세기도 지난 지금 식민지배의 흥물스런 유산이 청산되기는 커녕 오히려 되살아나기조차 합니다.

이러한 어이없는 현상들은 국정 운영자들의 낡고 천박한 역사인식과 가치관으로부터 비롯되고 또 반복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들은 201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둔 예비후보자들의 막중한 역할을 강조하면서 오늘날의 절실한 시대적 과제를 공유하고자 다음과 같은 질문을 공개적으로 제기합니다. 삼가 진지한 겹토와 친절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가, 대한민국 헌법은 전문에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이명박 정권이 집권하면서 광복절을 전국절로 대체하려고 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역사를 왜곡하여 특정 지배집단의 전리품으로 전락시키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입니다. 또 ‘식민지배가 한국의 근대화에 도움이 되었다’고 주장하는 일부 학자들의 그릇된 역사인식을 교육현장에서 강압적으로 전파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일본제국주의에 맞서 투쟁했던 선열들과 민주주의를 위해 싸웠던 분들의 고귀한 희생을 평가 절하할 뿐만 아니라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후보자께서는 이러한 역사 왜곡을 어떻게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나, 현 집권세력은 이른바 뉴라이트라는 특정 편향집단의 역사인식에 의거해 역사교과서를 개편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이는 정권을 잡자마자 추진되었으며 사회적 합의와 절차를 무시한 매우 중대한 권력 남용입니다. 만일 현 정권처럼 입맛에 따라 역사교과서를 마구잡이로 바꾼다면, 교육은 만신창이가 되고 지적으로 황폐화되는 혼란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후보자께서는 이런 사태를 어떻게 평가하며,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서 어떠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다, 지난 6월 한국 정부가 비밀리에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안)’ 곧 ‘한일군사협정’을 추진하려다 국민적인 비판을 받고 유보하였고, 또 국제적으로도 큰 파문을 야기한 바 있습니다. 시민사회를 비롯한 각계의 지적처럼 한일군사협정은 매우 위험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선 미국이 한-미-일 미사일방어(MD) 체제 구축의 일환으로 한일군사비밀정보협정을 강요하고 있어, 결국 동북아시아에서 군사적 긴장상태를 고조시킬 위험이 있다는 점입니다. 평화와 공존을 확장해 나가야 할 지금 시점에서 한일군사협정이 한일동맹, 나아가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이어져 동북아에 지역 패권을 다투는 갈등과 대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비후보자께서는 이런 사태를 방지할 정책을 어떻게 마련하시겠습니까?

다-1, 덧붙여 한일군사협정은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이자 주권을 제약하는 조약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합의와 국회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 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비밀리에 추진했습니다.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알 권리조차 유린한 처사에 대해 예비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 한일 간의 과거사 청산문제와 관련해서 한국의 사법부는 매우 의미 있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11년 8월 30일 일본군위안부와 원폭피해자 문제 해결을 두고 한일 양국 정부가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정부가 한일협정에 규정된 조정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또 대법원은 2012년 5월 24일 판결에서 1965년의 한일 청구권협정이 “일본의 식민지배 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협상이 아니라...한일 양국 간의 재정적·민사적 채권·채무 관계를 정치적 합의에 의하여 해결"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미쓰비시 중공업과 신일본제철회사에 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법적 책임이 여전히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제 이러한 사법부 판결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정치적 후속조치가 필요합니다. 먼저, 사법부가 한일협정은 식민지배의 배상을 청구한 협정이 아니라고 판단한 이상, 식민지배의 후과를 완전히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일협정의 전면적인 재협상이 반드시 추진되거나, 또는 그에 준하는 외교적 노력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앞장서 추진할 의향을 가지고 계십니까?

라-1, 또 오랫동안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반인도적 불법행위인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비롯하여 원폭피해자, 사할린 동포, 시베리아억류자, BC급 전범 문제와 이른바 '전범기업'의 강제동원·강제노동 문제들은 한결같이 일본정부와 협상을 통해 종합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과제들인데 이에 대한 정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라-2, 미국 CIA 특별보고서(1966년 3월 18일)에 따르면, 일본기업들이 한일청구권 협정의 1/5에 해당하는 거액의 정치자금을 모아 한국 민주공화당에 제공했습니다. 군사정권의 부도덕성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입니다. 이처럼 은밀한 악합을 통해 진행된 부폐와 부정의 과거사를 조사하여 진실을 밝히는 일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라-3, 또한 당시 박정희정권이 한일협정을 졸속으로 처리함으로써 일제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따지지 않아 일본이 한국의 식민지배가 합법적이었다고 주장하는 빌미를 주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한일협정재협상국민행동, 항일독립운동가단체연합회, 역사정의실천연대, 한일시민선언실천협의회 등 식민주의 극복과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실천하는 단체들은 대통령에 비후보자들에게 이상과 같이 공개 질의합니다. 후보자들의 의견은 곧 미래를 향한 중요한 지침이라는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들은 바쁘신 가운데라도 잠시 시간을 내 8월 10일까지 질의한 사항들에 성실히 답변해 줄 것을 정중히 요청합니다. 이 답변은 8월 15일 공개질의서와 함께 공개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8월 8일

한일협정재협상국민행동, 항일독립운동가단체연합회, 역사정의실천연대, 한일시민선언실천협의회

2012 대선 예비후보 공개질의서 답변 전문

◎ 새누리당

◇ 김태호 후보

가. 우리나라를 고조선 시대 이후 삼국시대, 통일신라와 발해, 고려, 조선시대로 이어진 반만년의 역사를 가진 나라다. 1910년 일본에 의해 역사상 처음으로 국권을 상실하여 의병, 독립군, 광복군 등 항일전쟁과 1919년 상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비롯한 수많은 독립운동단체의 투쟁으로 국가의 혼과 맥을 지켜왔다. 이후 36년만에 광복을 맞아 반만년의 건국사를 복원했다. 광복절은 해방과 정부 수립을 동시에 경축하는 의미가 있다. 이를 건국절로 변경하면 대한민국 정부수립만을 경축하자는 것이며, 민족의 해방을 위해 싸운 이들보다 전국에 참여한 이들이 더 중요하다고 보게 된다. 그리고 100년도 안된 역사를 가진 국가가 되어 버리고, 1910년부터 광복이전까지 38년을 스스로 국권상실 또는 국맥단절기로 만들어 버린다. 우리의 역사는 정치가, 특정집단이 이데올로기로 이용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나. 대한민국의 미래는 올바른 역사인식에서 비롯되고 우리 국민을 하나로 끓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초석이자 뿌리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특정집단의 합몰된 역사인식에 의거해 교과서를 개편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왜곡된 역사 인식을 심어줄 수 있어 우리 아이들의 역사관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올바른 역사인식을 우리 아이들에게 심어줄 수 있도록 철저한 검정을 통해 잘못된 역사교과서를 바로잡아 나가겠다.

다. 정부는 지난 6월 한일 군사 한일군사보호협정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면서 이를 목록에서 누락하고 사후에도 공개하지 않는 등 철저히 밀실행정으로 처리했다. 문제가 심화되자 외교부에서는 처리 사실을 인정하기보다는 실수로, 아직 처리가 되지 않았다는 거짓과 변명으로 대응했다. 이 문제는 국민과의 소통 부족에서 발생한 것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서는 빠른 결단력과 추진력도 중요하지만 국민을 무시하는 행정은 이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라-1. 중일전쟁 때 일본은 조선인 강제동원령으로 탄광, 군수공장 등으로 70만명 이상이 노무자로 끌려갔다. 형식상 직원이었지 급여는 한푼도 못받았다고 현재 살아 계신 피해자분들은 직접 얘기한다. 작년 9월 대법원은 일본 전범기업들이 강제징용자들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음에도 일본 정부에 대한 우리 정부의 미온한 태도, 그리고 전범기업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없어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일차적으로 일본정부와의 대화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노력할 것이며,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시에는 전범기업에 대해 강력한 제재조치와 더불어 적극적인 대응

을 하겠다.

라-2, 라-3. 일본 정부는 그동안 위안부, 강제징용자 피해 보상 문제 등이 제기 될 때마다 한일청구권 문제는 ‘최종적으로 해결한 것이며, 추후 어떤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는 청구권협정 부속합의의사록의 근거로 들며 일제피해자들에 대한 개인 배상을 거부하고 있는 입장이다. 반면 우리는 당시 협정은 일본의 식민지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협상이 아니고, 센프란시스코조약 제4조에 근거해 양국 간 재정적, 민사적 채권·채무를 정치적 합의에 의한 것이었지 개인의 청구권까지 소멸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한일청구권협정 당시 과거사 조사를 밝히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이보다 앞서 피해 당사자들의 실질적 보상이 이뤄지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한다. 또한 당시 국민의 반대를 무릅쓰고 일본과의 한일협정을 허용한 박정희 정권이 비난은 면하기 어렵다고 생각된다.

◎ 민주통합당 (가나다 순)

◇ 김두관 후보

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부정하는 위헌적 건국 60주년 행사와 건국절 지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함. 식민지 근대화론은 “일제의 식민지 지배가 한국의 근대화에 크게 기여했다”는 주장으로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정하는 일임.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기 위한 연구를 강화하겠음

- 최근 국내외에서 우리 역사에 대한 왜곡이 이뤄지고 있음
- 그럼에도 국내 역사 연구는 왜곡된 역사에 대응할 만한 역량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
- 따라서 역사 연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그 결과물들이 대중에게 전파돼 올바른 역사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음

나. 이명박 정부 이후, 사회적 합의 절차를 무시한 교육 과정 개정이 이뤄져 왔음

- 교육과학기술부가 교육 과정 개정에 대한 강력한 권한을 바탕으로 특정 집단 편향적인 역사 교과서를 만들어 냈음
- 이명박 정부는 2007년 7차 교육과정 개편 이후, 교과서 수시 개정이 가능해졌다는 점을 이용해 보수적 성격의 교과서를 출판했음
- 이명박 정부 집권 이후, 경제의 중요성에 대한 설명은 비중 있게 다뤄진 반면, 노동의 중요성에 대한 소개는 상대적으로 약화됐음

사회적 합의에 바탕을 둔 교과서 편찬 정책을 추진하겠음

- 사회적교육과정위원회를 신설해 교과서 편찬과정의 사회적 합의성을 높이겠음

: 사회적교육과정위원회는 정파를 초월한 각계각층 전문가들로 구성하되, 이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교과서를 편찬하겠음

- 교육 과정 개정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대신 사회적교육과정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겠음

다. 한국 내 X-Bander 레이더 기지의 배치나 미·일 MD 공동연구 참가 등 한국의 미사일방어 시스템 편입을 반대함

- 한국의 MD 참여는 종심이 짧은 한국에는 별로 실효성이 없으며, 개발·배치에 많은 국방예산 지출로 자칫 한국의 국방개혁에 차질을 줄 수 있으며, 불필요하게 중국을 겨냥한다는 오해를 불러올 수 있음
 - o 미국, 일본이 공동으로 주도하는 지역 MD에 참여하지 않고 독자적인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하겠음

다1.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절차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내용상으로도 문제가 있어 더 이상 추진하면 안 됨

- 절차상 국회에 사전설명이 크게 부족했고, 협정의 명칭에서 ‘군사’라는 용어를 삭제하여 눈가리고 아웅하는식으로 우리 국민들을 기만하려고 했음
- 내용상으로 이 협정에서는 군사정보의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지 않고 있어 악용의 소지를 내포하고 있음

라. 일본기업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된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해야 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므로 정치적·외교적 채널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음

라1. 저는 미쓰비시중공업, 신일본제철 등 일본의 해당 기업들이 강제동원 한국인들에게 즉각 손해 배상하도록 할 것임. 만약 이 기업들이 대법원 판결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우선 해당 기업의 국내 입찰을 전면 제한하고, 국내 자산을 차압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임

라2. 박정희 군사 정부는 억울한 자국민의 한을 풀어 주기는커녕, 자국민의 억울함을 담보로 거액의 정치자금을 확보했음. 너무 늦었지만, 새롭게 태어날 민주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국가의 의무가 있다는 점을 되새기며, 과거 정부의 횡포와 관련된 사실들을 마땅히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함.

라3. 잘못된 과거는 미래의 역사를 위해 바로 잡아야 함

- 한일협정은 일본의 침략 사실 인정과 가해 사실에 대한 진정한 사죄가 선행되지 않았고, 청구권문제, 어업문제, 문화재반환문제 등에서 한국 측의 지나친 양보가 국내에서 크게 논란이 됐음

- 한일협정 중 ‘무상’ 3억 달러라는 청구권 내용이 확정된 것은 36년간 식민지배 역사를 되돌아 봤을 때 굴욕적 결과였음
- 더불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한국 정부가 식민지배 피해자들의 피 땀의 대가를 중간에 가로챘다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함
- 비록 늦었지만, 희생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그에 걸맞는 대가를 되돌려 줘야 한다고 생각함

◇ 문제인 후보

가. 건국절 운운은 독립운동의 역사를 부정하는 것으로, 이같은 주장을 하는 이들은 말하자면 친일세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친일세력들의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이들이 헌법과 독립운동의 역사를 부정하고 친일의 역사를 정당화하기 위해 건국절을 들고 나왔다. 식민지 근대화론은 일제의 식민사관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서 친일청산을 하지 않은 것의 산물이다.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서 친일청산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민족정기를 세워야 한다. 아직도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독립운동사도 제대로 정리해야 한다. 과거 역사에 대한 진술한 성찰 없이 미래 비전은 만들 수 없다. 과거 역사를 왜곡하면 현재에 대한 평가도 왜곡되고 미래 비전도 사상 누각이 되고 만다. 특히 역사, 영토 주권에 관한 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있을 수 없다.

나. 뉴라이트의 역사인식은 식민지근대화론이 기본이다. 일제 식민지배를 긍정하고 독재를 찬양하며 민주화운동의 의미를 깎아내리는 것이다. 우리 사회는 이념의 편차는 있더라도 4·19는 학생혁명이고, 5·16은 군사구데타, 유신은 민주주의를 얹압한 독재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합의를 하고 있다. 그런데 뉴라이트는 이를 뿌리째 뒤흔들고 있다. 정권변화에도 불구하고 역사 교과서 개발은 정치를 떠나 합리적이고 학문적 차원에서 진행돼야 한다는 국사편찬위원회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다. 이번 한일군사정보협정 체결 추진은 절차상, 내용상, 합의상의 모든 문제를 안고 있는데 현 정부와 언론은 이 문제를 절차상의 문제로만 몰고 가면서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

- 한일 군사정보협정 체결은 절차상
 - ① 차관회의를 생략하고,
 - ② 국무회의에서 번복적으로 처리했으며,
 - ③ 협정 제목에서 ‘군사’라는 말을 생략했다는 문제가 있다.
- * 협정제목에서는 생략했지만 본문에는 군사기밀정보라고 명시

- 내용상으로는

- ① ‘안보관련 모든 정보 공유라는 표현(문서, 장비, 기술 등)’으로 인해 우리의 안보체계 전반이 노출되는 문제와,
- ② 일단 정보가 넘어가면 정보통제의 책임이 상대국에 있어 유출이 의심되는 정보라 할지라도 조사가 불가능하게 되는 정보통제권의 문제가 있다.

- 합의상으로는

- ① 한일군사정보협정은 한일간 군사동맹의 길을 여는 선도적 의미로
- ② 한·미·일로 이어지는 반중연합전선이 구축됨과 동시에 새로운 전영구도(한·미·일 VS 북·중·러)가 형성됨으로써 한국의 외교적 공간이 축소되고 비용은 증가할 수 있으며,
- ③ 일본과의 역사적 갈등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민정서에도 반하는 문제가 있다.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협정 체결을 보류했지만, 협정체결의 위험성이 분명하고 국민정서에도 맞지 않는 만큼 반드시 폐기하고 책임문제를 정확히 규명해야 한다.

라. 대법원이 내린 1965년의 한일 청구권협정은 일본의 식민지배 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협상이 아니므로 한일 양국 간의 재정적·민사적 채권·채무 관계를 정치적 합의에 의하여 해결해야 한다는 판결을 존중한다. 일본군위안부 문제, 제일동포 법적 차별문제, 약탈 문화재 반환과 역사왜곡 문제, 미귀환 동포 문제, 강제 동원 피해자 문제, 원폭 피해자 문제 등 미청산 과제가 한일협정과 관련되어 있다.

이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면 개정이든, 부분 개정이든, 아니면 해석 개정이든 많은 논의가 있다. 21세기 새로운 시대환경속에서 낡은 20세기의 유산을 근본적으로 청산하는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시민단체들은 정치권과 정부가 나서서 한일협정을 개정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식민지 피해보상 문제를 한일협정으로 해결되었다고 주장하는 일본정부를 정치적으로 압박하는 유용한 방법이다.

라1. 대법원이 1965년에 한일 청구권협정이 체결됐지만 개인의 청구권 자체까지 소멸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으므로, 정부는 일제 치하의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로부터 개인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위안부 문제는 국가권력이 관여한 불법행위이다. 일본정부는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 한일협정 3조에서 밝히고 있는 분쟁해결 절차를 통해서 일본정부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 이 문제에 대해 일본교과서에도 사실을 왜곡하지 않고 정확하게 기술하도록 촉구해나가겠다. 작년 9월, 대법원은 일본기업이 강제 징용자들에게 배상하라고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에 의해 정부가 담당해야 할 책무가 있다. 징용자나 사할린동포에 해서 이명박 정부의 태도는 미온적이다.

전범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은 올해에도 발전소 설비입찰에 뛰어들어 수천억원대의 수주실적을 올렸다. '전범기업 입찰제한 지침'을 유명무실하게 운영하는 정부의 책임이 크다. 전범기업들이 배상을 하지 않을 경우 입찰을 제한하는 강력한 지침을 만들겠다. 허로시마 원폭 투하로 인한 70만 피폭자 중 10%가 강제징용된 한국인이었다.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계 피폭자들이 일본인에 의해 차별적인 치료를 받는 것도 시정되어야 한다. 일본이 저지른 반인도적인 범죄행위에 대해 사죄와 배상을 받아내기 위해서 국제사회와 협조를 강화해나가겠다.

라2. 박정희 대통령이 한일청구권협정 협상과정에서 당시 민주공화당에게 일본기업으로부터 받은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것에 대해 사실규명이 필요하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가야할 개인배상을 중간에서 가로챘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진실을 밝혀야 한다.

라3. 박정희 정권시절에 정치지도자들이 독도문제를 비롯하여 일본의 과거사 문제에 대해 명확하고 단호한 입장으로 이를 제대로 마무리 짓지 못했다. 이것이 지금까지 과거사 문제를 정리하지 못한 이유이다.

◇ 박준영 후보

가. 일본의 역사왜곡에 대응하는 방향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 일제의 잔재를 제대로 청산할 기회를 갖지 못한 우리 내부의 문제입니다. 2005년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발족으로 적지 않은 성과를 거었지만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명박 정부들어 이마저도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과거 친일한 인물들을 찾아내어 멸주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밝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공론의 장에서 토론을 거쳐 검증된 진실을 토대로 과거사를 재조명하려는 우리의 노력이 시급합니다.

둘째, 일본 뿐만 아니라 당시 일제의 침략을 겪었던 중국 및 아시아 국가들과의 교류가 중요합니다. 역사학자 및 사회단체들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서 역사적 사실을 하나씩 밝혀나가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당연히 이를 지원해야 합니다.

역사적 진실을 확인하려는 노력은 시간에 구애받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과거에 대해 끊임없이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우리가 과거에 얹매이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불행한 일들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려는, 미래를 위한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노력들이 모여 조금씩 결실을 거두게 되면 우리의 후세들과 일본의 후세들은 장래에 역사적 난관을 극복하고 공동번영과 아시아는 물론, 세계의 평화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조금하지 말고 긴 호흡으로 미래를 바라보며 대응해야 할 중요한 문

제인 것입니다.

나. <한중일이 함께 쓴 동아시아 근현대사>라는 책이 얼마전에 출간 되었습니다. 한국과 중국, 일본의 역사학자들이 10년 넘게 한 주제에 매달린 끝에 나온 결과물입니다. 미미한 정부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소장학자들이 역사적 책무를 다한 소중한 책입니다. 저는 이 책이 발간된 과정이야말로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준다고 생각합니다.

역사적 관점은 물론이고 서로 언어와, 학술용어조차도 다른 분들이 10년 동안 토론하고 의견을 조율하고 집필했다는 것은, 지금의 한중일 관계로 보았을 때 거의 '기적'에 가깝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중일 3국의 관계는 이런 역사적 책무와 그걸 가능하게 하는 노력 없이는 무엇도 이를 수 없을 것입니다. 뉴라이트 계열의 역사교과서 수정 시도나 일본 극우집단의 왜곡사례도 결국은 이런 과정을 통해 해소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정부가 할 일은 이런 의지를 지닌 분들에게 정책적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다. 현재 한미일 3국은 한-미 간, 미-일 간 각각의 상호방위조약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일본은 군대가 없습니다. 자위대는 자체방어만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입니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이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겠다는 건 당치 않은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외교는 밀그림을 그려놓고 거기에 맞춰 현재의 조건들을 운용하는 기술인데, 이명박 정부가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런 밀그림이 있거나 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무역의 24%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해군기지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중국을 그 대상으로 한다는 건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중국과의 관계를 어떤 식으로 끌고가야하는지, 또 남북관계는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지 철학과 비전이 있어야 하는데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국가 간의 조약과 협정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헌법에 그 권능이 적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국회와 긴밀하게 상의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경청해야 하는 것이지요. 제가 대통령이 되면 모든 문제를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겠습니다. 출마선언문에서 밝힌 대로 매달 한 차례 이상 국회의 정치지도자들과 만나 현안을 상의하고 이를 국정에 반영할 것입니다.

라. 우리의 근현대사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다 보면 과거의 불미스런 일들은 자연히 밝혀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일협정에 대한 외교문서는 철저히 공개해서 공론

의 장에 내놓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평가와 판단은 국민들이 할 것입니다.

한국인을 강제로 징용한 일본 기업에 대해서는 국가가 나서서 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미쓰비시의 경우 이미 징용 한국인에 대해 지급해야 할 돈을 공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되찾기 위한 소송에 우리 정부가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끌으로, 분단된 우리의 현실 자체가 외교적 수단을 사용하는 데 한계로 작용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남북이 서로 다투는 마당에 일본이 우리의 의견을 들어줄 리가 만무합니다. 일본과의 외교에서 우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먼저 남북관계의 회복과 교류 협력이 정말 중요합니다. 일본과 중국의 외교적 문제는 절대 남북관계를 벗어나서 생각할 수가 없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 손학규 후보

가. 1948년의 그 갑격을 부르는 이름이 ‘전국’이 아니라 ‘정부수립’이라는 이유로 기뻐하지 않을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은 없습니다. 그러나 ‘정부수립’과 ‘전국’은 차원이 다른 문제이며, 이는 우리 국민들의 정체성을 어떻게 규정짓느냐의 문제와 연관된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전국 60주년 기념사업’을 추진하면서 논란을 일으킨 것은, 일본제국주의에 맞서 싸웠던 선열들의 희생을 부정하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입니다.

현 정부와 같이 대한민국 건국을 1948년으로 규정한다면 국권침탈기 대한민국의 실체를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독도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1900년대 일본의 한반도 침략과정이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되던 와중에 일시적으로 점령당했지만, 우리 민족의 끈질긴 독립투쟁의 성과 위에 광복을 맞이했기에 지금까지 어떠한 침탈 없이 온전히 이를 영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건국이 1948년 8월 15일이 되어서야 이루어졌다는 주장은 일본에 의한 독도 강점기간이 인정받을 수 있다는 근거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특정세력, 특정집단이 더 이상 이와 같은 그릇된 역사인식을 퍼뜨리지 못하도록 단호히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나. 이명박 정부에서는 이념적 잣대로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수정하였습니다. 특히 정당한 절차도 생략한 채 역사교과서를 수정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심각한 혼란을 주었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치 이념에 따라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되고, 교육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이 훼손되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독립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노사정 합의체처럼 정권에 관계없이 교육정책에 대한 사회적 담론 형성과 일관성 있는 교육개혁

에 대해 합의를 도출해 낼 수 있는 국가 차원의 ‘국가교육위원회’ 설치할 것입니다.

다. 국가간 군사 협력은 국민적 공감대 위에서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추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가 비밀리에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맺고자 한 것은 국민을 무시한 처사입니다.

일본과의 군사협력 추진은 남북한 대화와 동북아 평화에 커다란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가 내거는 목적과 달리 한반도를 동북아에서 전영간의 충돌현장으로 만들도록써 국가 안보에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도 있습니다.

더욱이 일본이 독도와 위안부문제 등 과거사 문제에 대해 아직도 성의 있는 태도로 임하지 않고 있는 때 한일 양국간 군사 협력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군사보호협정을 비롯한 한일간 군사협정은 추진하지 않을 것이며, 현재 진행 중인 협의도 중단할 것입니다. 한반도에서 상호위협 감소를 위한 안보외교와 미·중·일·러 등 주변 4강과의 협력적 외교를 강화하는 일에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라. 국가간 군사 협력은 국민적 공감대 위에서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추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가 비밀리에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맺고자 한 것은 국민을 무시한 처사입니다.

일본과의 군사협력 추진은 남북한 대화와 동북아 평화에 커다란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가 내거는 목적과 달리 한반도를 동북아에서 전영간의 충돌현장으로 만들도록써 국가 안보에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도 있습니다.

더욱이 일본이 독도와 위안부문제 등 과거사 문제에 대해 아직도 성의 있는 태도로 임하지 않고 있는 때 한일 양국간 군사 협력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군사보호협정을 비롯한 한일간 군사협정은 추진하지 않을 것이며, 현재 진행 중인 협의도 중단할 것입니다. 한반도에서 상호위협 감소를 위한 안보외교와 미·중·일·러 등 주변 4강과의 협력적 외교를 강화하는 일에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라1. 일본 정부와의 협상은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그동안 우리 정부가 식민지배로부터 피해를 입은 우리 국민들에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헌법 위반’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존중하여, 시간이 걸리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먼저 해결에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라2.라3. 대학 시절 한일협정 반대투쟁이 나섰던 사람으로서 가슴 아픈 일입니다. 1965년 박정희 정권 당시 졸속 체결된 한일협정의 문제점을 면밀히 짚어 보아야 합니다. 당시 협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면 지금이라도 바로 잡는 방법을 찾아볼 것

입니다. 당시 협상과정에서 불투명한 부분이 있다면,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기구를 통해 명백히 진상을 규명하도록 할 것입니다.

◇ 정세균 후보

가. 광복절의 건국절 대체는 절대 불가

- 대한민국 헌법과 임시정부의 법통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위험 행위이자 불굴의 투지로 일제에 맞서 싸운 항일독립투사의 명예를 더럽히는 반민족적 처사
- 대한민국 헌법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제헌헌법도 48년 정부 수립을 '재건국'으로 명확히 규정
- 이승만 대통령도 정부 수립 당시 '건국 30주년'이라고 말한 바 있음. 광복절을 건국절로 대체하려는 시도에 대한 강력 대응할 것

나. 보수 재집권 시도

- 대한민국 현대사를 보수정권 입맛대로 재단하는 것은 국민을 속여 다시 정권을 잡아보겠다고 하는 속셈
-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는 둘째 문제고, 교과서 개정을 권력 추구의 도구로 이용하는 인식 자체가 심각한 문제

교과서 개정을 한다면 반드시 공론화 필요

- 속도적으로 밀실에서 처리하면 결코 안되는 사항

다. 한일 정보보호협정

- 한일 정보보호협정의 체결은 일본의 '미일 신방위지침'에 명시된 주변사태 개입을 한반도까지 확대할 우려
- 냉전적 이념외교, 진영외교(한미일 대 북중러의 신냉전구도)로 회귀할 우려
- 원칙적으로 반대.

다1. 한일 정보보호협정

- 한일 정보보호협정의 체결은 일본의 '미일 신방위지침'에 명시된 주변사태 개입을 한반도까지 확대할 우려
- 냉전적 이념외교, 진영외교(한미일 대 북중러의 신냉전구도)로 회귀할 우려
- 원칙적으로 반대.

라. 한일간의 관계 재정립 노력

- 미진한 과거사 문제와 영토 문제를 정리하는 획기적 전환점 필요

- 차기 정부에서 이에 대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

라1. 관련 단체와 적극 협의

- 현재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는 없지만, 충분히 공감하는 내용
- 차기 정부에서 피해자 및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필요하다면 국가가 적극 나서야 할 것

라2. 적극 검토

- 향후 보다 자세하게 내용을 검토해,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추진할 것

라3. 동의

- 졸속 한일 협정은 양국간의 많은 문제들에 대해 계속 논란이 제기될 수 밖에 없는 원인을 초래했음